
전문 용어의 국어화

강현화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전문 용어의 문제를 논의하려면 그 출발이 되는 것이 전문 용어의 개념 정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사용의 주체와 범위, 정비의 방향성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본고의 논의인 국어화의 방법과 방향 설정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간의 전문 용어의 개념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은 강현화(1998, 2000, 2002), 박형익(2000), 조은경·서상규(2000), 윤기찬(2002), 신기철(1998), 강현화·김유미(2008)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학술 논문 외에도 연구 용역 보고서의 서두에는 늘 전문 용어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우리말큰사전》(1957), 한글학회(1991), 《표준국어대사전》(1999) 등의 사전에서도 전문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전문 용어 사용 주체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문 용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영역과는 구분되는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 영역이란

대개 학술 영역, 때로는 특정 직업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기철(1988), 강현화(1998, 2002)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의 주체 또한 해당 영역에 속한 사람들, 즉 ‘직업이나 일을 같이하는 사람’, ‘전문가’, ‘전문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06년도의 국어기본법 이후에는 전문 용어의 공공 언어로서의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제17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용의 주체에 일반 국민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문 용어의 표준화, 관리, 보급을 국가가 주관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현화(2009, 2010)의 연구에서도 전문 용어의 사용 주체를 확대 해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전문 용어의 사용자를 특정 분야에 속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으로써까지 확대하고 있어 전문 용어의 개념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의 입장과 공공 언어로서의 전문 용어라는 현시대의 요구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전문 용어가 국민 생활과 무관한 전문가 집단의 용어라면 특별히 정비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전문인들만이 사용한다면 유입된 용어의 경우 번역보다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음차해서 적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것이며, 사용의 용이성보다는 용어의 전승성에 초점을 두어 전문가 집단의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문 용어의 일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온통 전문 용어투성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전문 용어는 신문이나 방송의 정치 용어 외에도 법원이나 동사무소, 세무서, 은행에서 만나게 되는 법률 용어, 행정 용어, 경제 용어가 있다. 건강을 걱정하며 들여다보는 인터넷에도 의학 전문 용어가 산재하며, 라디오에서 들리는 교통 전문 용어, 도서관의 전문 용어, 박물관의 전문 용어, 영

회관의 전문 용어 등 생활 자체가 전문 용어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약을 사면서 복용 설명서를 읽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서 사용법을 읽고 화장품을 사면서도 전문 용어를 알아야 한다면 더 이상 전문 용어는 전문가만의 용어라고는 말하기 힘든, 생활 속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는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상호 작용은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와 문화의 보급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상호 작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 양상에 비추어,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적절한 표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분화된 사회일수록 하나를 관통하는 표준화, 통섭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치되지 않은 표기법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여권 등 공문서나 작품 번역 및 인용문 작성 시 영문 성명 표기 방식의 차이로 정보·지식 교류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부·공공 기관의 공문서, 광고물, 식품, 의약품 등의 설명서도 영어나 난해한 전문 용어를 여과 없이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즉,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단절, 정보 왜곡, 나아가서는 계층화, 종속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 산업, 행정,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용되는 언어 중 현실적으로 통용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국가는 이러한 전문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6년 국어기본법 안에서 전문 용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어기본법 제17조를 통해 전문 용어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쉬운 영어 운동(PEC: Plain English Campaign)은 '공문서'를 대상으로 시작돼 경제·교육 분야로 확대되어 정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형성 지침

그간의 연구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리수락(2000), 설문원(2003), 최기선 외(2009)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동기화(투명성): 그 지칭 개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용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때 동기화되었다고 말한다.
- (2) 일관성: 그 분야의 개념 체계에 상응하는 일관된 용어 체계에 부합해야 한다. 신생 용어는 기존 용어와의 개념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적합성: 표준 용어로 제안하는 용어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의미 양상을 따르는 것이 좋다.
- (4) 언어 경제성: 용어는 가능하면 간략해야 한다.
- (5) 파생력: 생산적인 용어 형성 방식 즉, 파생어를 산출하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6) 언어적 정확성: 전문 용어는 해당 언어의 형태적, 통사적, 음운적 특징을 충족시켜야 한다.

(7) 모국어 선호: 전문 용어를 생성할 때 외국어 차용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직접적인 차용보다는 해당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된 전문 용어 형성의 지침은 국어화 논의에서도 많은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국어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해서 국어화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2.2. 주요 쟁점

그간 이루어진 전문 용어의 국어화에 대한 주요 쟁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어 단위를 고유어화할 것인가, 한자어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¹⁾에 의하면 고유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으며,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유어화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표1>

		학술	교육	행정	언론	일반	전체	$\chi^2(p)$
전문 용어	네	20	18	15	6	14	73	
		50.0%	78.3%	55.6%	46.2%	42.4%	53.7%	
고유어화	아니요	20	5	12	7	19	63	
		50.0%	21.7%	44.4%	53.8%	57.6%	46.3%	

1) 조사는 2009년 9월~12월에 이루어졌으며, 예비 설문과 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자의 구성 비율은 학술 전문가 40명(29.4%), 교육 관련 종사자 23명(16.9%), 행정 관련 종사자 27명(19.9%), 언론인 13명(9.6%), 일반인 33명(24.3%)이다.

2) 본문에서 인용되는 수치는 강현화(2010)를 참고한 것이다.

사실 전문 용어의 상당수는 자생적 단어가 아닌 국외에서 유입한 어휘 들이며, 최근 들어 유입 경로는 최초의 원어와는 관계없이 영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용어의 도입은 주로 학술 연구자들이 관여하게 마련이다.

<표2>

번역한 경우	음차한 경우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경우
한자어 한자+고유어 고유어	원어 음차 원어의 약어 원어 약어의 음차	한자+원어 음차 고유어+원어 음차 한자+원어 음차+고유어

전문 분야별로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자어로 이루어진 용어가 고유어 용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어휘 전반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전문 용어의 한자어 비중이 높은 것은 사전의 표제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전문가 집단은 전문 용어의 정비 시, 용어 사용의 친근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쉽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고수하고자 한다.³⁾ 하지만 이들 용어는 현대 국어에서 알기 어려운 조어법을 가졌거나 일본식 번역 투의 어휘(이로 인한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 어휘), 영어에 의존한 음차식 어휘가 다수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전문가 집단에게는 익숙하나 일반인이나 새롭게 전문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후세 연구자 집단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유어화에 치중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지나친 고유어화도 일반인에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자어의 경우 이미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용어라면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이러한 문제에

3) 물론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와 새롭게 정비된 용어 사이의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대한 결정은 용어 자체의 이해력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용어 정비자의 언어 사용 철학에 따라 용어 번역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고유어나 한자어나의 문제보다는 일상생활에 친숙한 고빈도 어휘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비슷한 빈도라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고유어로 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언어 사용자에게 익숙한 고빈도 어휘들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진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음차 표기에 관한 문제이다. 전문 용어 분야 중 과학 용어와 같은 분야는 특히 음차식 전문 용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번역을 하지 않고 음차로만 적는 것은 의미에의 접근성을 매우 낮추는 일이며, 전문적 의미를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언어로서의 전문 용어라면 가능한 한 번역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 결과도 언론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번역어 사용에 긍정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언론과 일반인 집단에서의 추가 설문 결과를 보면, 번역어보다는 자생적 용어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러한 수치가 음차식 표기를 찬성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학술	교육	행정	언론	일반	전체	$\chi^2(p)$
외래어의 번역어 사용	네	25	17	19	6	18	85	4.365 (.359)
		62.5%	73.9%	70.4%	46.2%	54.5%	62.5%	
	아니요	15	6	8	7	15	51	
		37.5%	26.1%	29.6%	53.8%	45.5%	37.5%	

따라서 일부 약자로 이루어진 용어의 음차나 이미 널리 알려진 음차식 용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국어의 어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전문 용어 표기의 어문 규정 준수에 대한 문제이다. 전문 어휘

역시 국어의 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문 용어의 어문 규범 적용은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어문 규범 준수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의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표4>

		학술	교육	행정	언론	일반	전체	$\chi^2(p)$
어문 규정 준수	네	36	22	24	12	28	122	1.842 (.765)
		90.0%	95.7%	88.9%	92.3%	84.8%	89.7%	
	아니오	4	1	3	1	5	14	
		10.0%	4.3%	11.1%	7.7%	15.2%	10.3%	

하지만 이미 굳어져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가운데에는 어문 규정에 위배되는 어휘가 적지 않은데, 큰 틀에 있어서는 어문 규범 준수를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 중에도 개별 어휘를 논의하게 되면 관용성의 잣대를 중요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당 전문 용어가 일상 어휘로서의 의미도 있는 경우, 표기법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어문 규정에 따른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 기존의 전문 용어집에 나타난 관련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⁵⁾

- 표기법: ‘사이시옷’ 등 표기 오류, 모음 ‘에’와 ‘애’/ ‘오’와 ‘우’의 잘못된 사용, ‘울’과 ‘물’의 잘못된 사용, 부호 오류.
- 띄어쓰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용어집 간의 상당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를 다 붙여 써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

4) 예를 들어 의학 용어의 경우, ‘넓적다리’가 맞는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넙적다리’를 고집하거나, 일부 사잇소리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일상용어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5) 강현화(1999, 2000) 참조.

하기 어려웠고, 구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명사화하여 뒤에 붙는 명사와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았다. 붙임표와 같은 문장 부호의 사용 역시 한 목록집 내에서 또는 목록집 간에 일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문 규정 준수에의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 준수의 문제와 연관된다. 전문 용어의 많은 수가 음차 용어라는 점에서 외래어 표기 준수 문제는 커다란 쟁점이 되어 왔다. 특히 표기의 방식을 영어식 발음과의 부합성에 초점을 두는 전문가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영어식 발음에 근접하는 표기 노력은 분야 간이나 학자 간에 따라 발음의 다양한 변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 분야에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특정 분야의 학술 집단의 경우, 발화와 표기와의 괴리로 인해 그만큼 외래어 표기 준수에 대한 반발도 크다. 발음 차용은 한글 표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원어의 연상이 쉬워 언중에게 외국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문에 추가된 개인 의견을 살펴보자.

[찬성] ㉠용어 통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해야 함. ㉡반드시 준수해야 표기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표기 통일이 이뤄져야 사용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음.

[반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쓰는 것은 관용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함.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점차적으로 원어의 음운 규칙에 부합하게 표기해야 함.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의 대립이 팽팽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문 용어 목록집에 나타나는 외래어 표기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목록집마다 또는 동일한 목록집이라도 인접 분야에 따라 외래어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외래어 표기의 오류는 쓸데없이 모음을 삽입하는 경우, 같은 자음이 연속으로 되었을 때 된소리로 적는 경우, 자음으로 끝났을 때 받침으로 쓰지 않고 늘여 쓰는 경우, 외래어의 이중 모음을 국어의 이중 모음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 혹은 인명, 지명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 음성 기호가 아닌 알파벳에 의한 표기의 경우, 어말과 자음 앞에서 무성 파열음 [p], [t], [k]와 유성 파열음 [b], [d], [g]에 ‘으’를 붙이는 경우, 발음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되지 못한 표기들과 실제 발음과 표기상의 차이를 무시한 표기가 많았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문제는 비단 전문 용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최선은 표기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다. 용어의 외래어 표기 불일치는 용어의 검색이나 지식 전달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의 정보 활동이나 산업 분야, 기계 번역 시스템에서 외래어 표기의 불일치는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장 부호법에 대한 의견 역시 전반적으로는 규범의 준수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부 부호에 있어서는 국제적 기준과의 호환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의견] ㉠국립국어원 문장 부호법에 따르되, 일부 부호는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는 게 좋겠음. ㉡문장에서 타자에 불편한 《》, 『 』, · 등을 피하면 좋겠음. ㉢의미 구분을 위해 붙임표(-)는 필요할 수 있으나 발음 부호(강세, 숨표, 어깨점, 악센트 등) 사용은 지

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넷째는 전문 용어의 조어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문 용어를 만들어 내는 기존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과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기존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용어가 해당 용어의 의미 외에 전문 용어의 개념을 획득하는 경우와 일반 용어 의미가 약화되고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 타 분야의 용어를 차용해서 해당 전문 분야의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파생과 합성, 축약어 또는 줄임말의 형식으로 새로운 어휘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최근 파생이나 합성에 의한 전문 용어 조어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축약의 형태 역시 간결함을 추구하는 전문 용어의 특성상 각광 받는 방법의 하나이다.

특정 학문 영역별 조어의 특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로 형태적인 특성으로 언어학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전문 용어와 일상어에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전문 용어의 조어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조어의 새로운 형식은 과감히 받아들여,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루어 혼란이 있거나 신조어의 방식이 해당 의미를 파악하기에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국어화에 적합한지 고민해야 한다. 강현화(1999, 2000)에서 살펴본 분야별 전문 용어의 오류 표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예들이 가장 많았다.

- 합성법의 문제: 임시어(잠재어)에 의한 단어 합성으로 실제 언어 사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합성어들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 파생법의 문제: '-개, -□, -기' 등의 파생 접사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전문 용어를 파생하는 데에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래의 몇 가지 원리를 조어 방식의 지침으로 삼아 볼 만하다.

- (1) 가능한 한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새로운 단어 형성의 방식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 (2) 다른 용어 형성에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용어 형성 방식을 이용한다.
- (3) 용어 형성에 사용되는 조어 단위는 가능한 한 개념적 연관성이 있는 다른 용어들의 번역 및 조어 방식에 적극 활용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 (4) 원어 용어가 합성어일 경우, 그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이미 기존 전문 용어로 존재한다면, 가능한 기존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줄인다.

다섯째는 용어 선정의 문제로 일상어와의 변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일상어와 전문어는 명확한 의미 차이를 가져 동음이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일상어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이 둘을 변별하기란 쉽지 않다.⁶⁾

이러한 전문 용어 선정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인물, 단체, 조약, 협약, 고유 명사 등의 영역에서 전문 용어의 제한 범위를 어떤 준거로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문 용어의 대부분이 명사에 머무는데, 용언형 용어에 대한 고려나 ‘체언+용언’의 연어 구성으로 나타나는 전문 용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목록형 용어 기술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의미 기술과 용례 제시도 연계되는 전문 용어 사전에서는 중요한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

6) 사전에 전문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게 되면, 일상어와 전문 용어 혹은 전문 용어 간의 사용역에 따른 의미나 용법의 변별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형 지식 대사전의 전문 용어 기술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3. 마무리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전문 용어의 국어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어화의 세부 지침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 앞서 논의한 대로 국어화 지침에 따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내 혹은 영역 간 용어의 차이는 지식·정보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전문 용어 국어화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정비 지침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둘째, 전문 용어 사용 분야 전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전문 용어와 관련하여 학계, 산업계, 언론계,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달라 의사소통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우선은 공공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행정, 언론의 용어부터 출발해서 차후로 교육, 산업 용어에 이르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공공 언어로서의 용어와 학술 용어 간의 표준화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학술 용어는 용어 수의 방대함이나 전문성의 깊이로 인해 공공 언어로서의 용어와는 차별화되고 분과별, 분야별 다양한 견해 차이로 인해 쉽게 표준화에 이르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각 영역을 연계한 표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참고 문헌

- 강신항(1984), 현대 한국인의 외국어 및 외래어 어휘 사용 양상과 그 문제점, 《한국어연구논문》 5, KBS한국어연구회.
- 강현화(1998), 전문 용어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제안, 《언어정보와 탐구》 1.
- 강현화(2000), 외래어 전문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 《어문연구》 108.
- 강현화(2002), ISO 2382 용어에 대한 북한 용어집과 KS 통합 완성본과의 비교 연구,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강현화(2009), 《정책 및 법령 용어 순화 정비 연구》, 노동부 정책 보고서.
- 강현화(2010), 《전문 용어 표준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 문화부 정책 보고서.
- 고석주 외(2007), 《전문 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태학사.
- 권성아(2007), 남북 교과서를 통해 본 전문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사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17권 제1호, 국립국어원.
- 김세중(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 한국언어학회.
- 김수업(2007), 전문 용어의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제17권 제1호, 국립국어원.
- 김한샘(2008),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학회발표집》 28, 한말연구학회.
- 남길임(2008),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표제항에 대한 사전학적 분석: 식물 영역 전문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7집, 언어과학회.
- 송영빈(2000), 전문 용어학의 제 문제, 《전문용어연구》 1,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이기문(1976), 국어 순화와 외래어 문제, 《어문연구》 12, 일조각.
- 임흥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선 외(2000), 정보 기술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